

일본·일본인과 3.1운동

이형식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대통령 직속으로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회를 조직하여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역사, 문학, 사회학 등 관련 학회들은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거나 개최를 예정하고 있을 만큼 올해는 3.1운동 학술 연구가 풍성한 해라고 할 만하다.

한국에서의 3.1운동 연구는 한국 사회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변화해왔다. 3.1운동 연구는 50주년을 맞이한 1969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70명이 넘는 학자들이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1,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논문집으로 출판했다. 70주년(1989년)에는 1980년대 민중사적 흐름에 기반하여 민중, 계급에 중점을 둔 연구가 진행되었고, 1990년대 이후에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연구분야에도 영향을 주어 지역의 3.1운동 연구가 활성화되었다.¹ 90주년(2009년)에는 역사 연구자만이 아니라 문학, 문화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연구의 흐름을 만들어냈다. 100주년(2019년)에는

이형식(李炯植) 현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부교수. 고려대학교 동양사학과에서 학사를, 도쿄대 일본사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를 받았다. 식민지 관료, 재조일본인, 조선주둔군 등을 통한 식민지 정치사를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朝鮮總督府官僚の統治構想』(吉川弘文館, 2013), 『제국과 식민지의 주변인: 재조일본인의 역사적 전개』(공저, 2013), 『齋藤實·阿部充家 왕복서한집』(아연출판부, 2018) 등이 있다.

1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100주년기획위원회 엮음, 『3.1운동100주년총서 1 메타역사』, 휴머니스트, 2019.

한국역사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총 5권의 3.1운동 100주년 총서를 발행하여 3.1운동을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이렇듯 한국에서의 3.1운동 연구는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3.1운동의 성격(민족해방운동), 문화사적인 연구, 지역사 연구, 무단통치에서 문화정치로의 전환 등 매우 다양하고 방대한 연구 축적을 이룩했으나, 그 시각이 주로 한국 내부의 문제에 국한되어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3.1운동을 탄압했던 일본·일본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경향이 있다.² 식민지시기 최대의 민족운동이자 1919년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었던 반식민지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던 3.1운동은 조선 내부의 문제, 식민지만의 문제였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는 3.1운동 전후 국내외 정세에 대한 개괄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국과 식민지를 총동원한 총력전(total war)으로 치러진 제1차 세계대전은 식민지-제국질서의 심각한 동요를 초래했다. 총력전에 동원된 식민지 민중들은 식민지 본국에 민족자결과 정치참여를 요구하여 사회질서의 재편과 제국질서의 동요를 불러일으켰다. 사회주의, 민주주의, 민족자결주의 사조가 전파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개조'의 기운이 확산되었다.³ 제국 일본에서는 3.1운동으로 대표되는 반식민주의(민족자결주의), 입헌군주제를 위협하는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 개조의 사상이 확산되면서 '제국의 위기'에 직면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제국개조'의 사상, 정책, 실천 등이 등장했다.

3.1운동은 일본의 민주화를 진척시켰다. 당시 수상이었던 하라 다카시(原敬)는 육군 조슈파(長州派)가 장악하고 있던 식민지 정계의 판도를 바꾸려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지도자였다. 하라가 추진한 식민지 통치 개혁의 주된 내용은 무관총독제와 헌병경찰제를 폐지하는 것이었는데, 이것

2 조선총독부와 조선군의 3.1운동 탄압에 대해서는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100주년기획위원회 엮음, 『3.1운동100주년총서 3 권력과 정치』, 휴머니스트, 2019를 참조할 것.

3 米谷匡史, 「三・一獨立運動, 五・四運動と帝國日本のデモクラシー(特集 三・一獨立運動, 五・四運動 100年と日本)」, 『歴史地理教育』 891, 2019.

은 식민지에서의 조슈파 파위를 대폭 축소시키고 본국의 제도와 법률을 식민지에 연장하는 ‘내지연장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하라 내각 성립 직후부터 관동도독부를 비롯한 식민지 통치 기구의 개편이 이미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이 하라 내각 식민지 통치개혁의 직접적 계기였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3.1운동이라는 민족적 저항이 없었다면 육군 조슈파의 반발을 쉽사리 억누를 수 없었을 것이다. 다이쇼정변, 쌀 소동, 3.1운동으로 대표되는 민중운동이 고양되는 가운데 육군 조슈파는 식민지에서 세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었다.⁴ 3.1운동 이후 실시된 정당세력은 그동안 식민지를 지배해왔던 육군을 대신해 식민지 통치(‘문화정치’)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정당은 본국과 식민지를 아우르는 제국정치, 제국통합의 주역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로써 정당세력은 3.1운동을 계기로 ‘발견’된 식민지 ‘사회’와 정면으로 직면하게 되고 식민지제국 통합의 주역으로서 그 능력을 검증받게 된다.

한편 3.1운동은 국제적으로도 ‘제국의 위기’를 고조시켰다. 1919년 2월 일본은 국제연맹위원회에 일본인의 미국 이민 규제를 반대하는 ‘인종차별 철폐안’을 제출했지만 영국, 프랑스 등의 반대로 만장일치를 이루어내지 못해 부결되었다. 유색인종 중 유일하게 세계 5대 강국임을 자임했던 일본으로서 제국의 위신을 구기는 사건이었다.⁵ 파리강화회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도중에 3.1운동이 발발했다. 3.1운동 발발을 계기로 일본의 조선 지배가 다른 열강의 식민지 지배와 비교하여 가혹한 것이 아닌지 파리강화회의와 미국 워싱턴의 상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일본이 전쟁 중에 독일로부터 빼앗은 남양(南洋)의 위임통치를 맡겨도 좋을지 논의되기 시작했다. 파리강화회의에 승전국으로 참여해 세계 5대 강국임을 자임했던 제국일본의 ‘불안’이 감지되기 시작한 것이다.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한 정치가, 저널리스트, 실업가들은 일본에 돌아와 ‘일본위기론’을 주장했다. 이들은 제1차 세계대전의 승패 원인을 분석해 대

4 이에 대해서는 줄고, 「1910년대 일본의 식민지 통치구조 개혁과 조선 통치」,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 100주년기획위원회 엮음, 『3.1운동100주년총서 3 권력과 정치』, 휴머니스트, 2019를 참조할 것.

5 이에 대해서는 한정선, 「오만한 일본, 불안한 제국」, 『일본비평』 20, 2019를 참조할 것.

전 이후 전개된 ‘세계개조’의 흐름과 연동시켜 ‘제국의 위기’를 타개할 ‘국가개조론’을 주창했다. 이들이 내건 1) 보통선거론, 2) 신분적 차별의 철폐, 3) 관료외교의 타파, 4) 민본적 정치조직의 수립, 5) 노동조합의 공인, 6) 국민생활의 보장, 7) 세제의 사회적 개혁, 8) 형식교육의 해산, 9) 신영토 조선, 타이완, 남양 통치의 쇄신, 10) 궁내성의 숙정, 11) 기성 정당의 개조 등의 ‘국가개조론’은 다가올 총력전에 대비한 국내개조뿐만 아니라 식민지 통치의 쇄신을 포함한 ‘제국개조론’이었다.⁶ 이러한 제국의 위기에 대응하여 일본제국은 새로운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제국(국가)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제국개조’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00년 이후 일본학계에서는 제국과 식민지의 상호작용, 상호영향에 주목하는 제국사 연구가 진행되어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하지만 3.1운동 연구는 주로 한국 내부 문제에 집중되어, 일본과 일본인에 초점을 맞추어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이끌어내는 작업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 이번 특집 기획에서는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로 일본과 일본인은 3.1운동을 어떻게 인식(보도)했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3.1운동이 일본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힘으로써 현재의 일본, 일본인에게 3.1운동이 어떤 의의/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번 특집에는 모두 다섯 분의 필자가 참여해 주셨다. 이 시기를 전공하지 않았던 분도 계셨고, 전공은 3.1운동 연구와 관련이 있지만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한 주제와 관련된 사료가 적어 집필에 고생하셨던 분도 계셨다. 어려운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집의 집필을 맡아주었던 집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박완의 「3.1운동 전후 조선인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일본 육군 내 논의」는 한국병합 이후부터 3.1운동 후까지 조선인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에 관한 일본 내 논의를 조선군과 육군 중앙을 축으로 살핀 귀중한 연구성

6 파리강화회의 이후 등장한 국가개조론에 대해서는 加藤陽子, 『それでも、日本人は「戦争」を選んだ』, 朝日出版社, 2009를 참조할 것.

과이다. 이에 따르면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郎), 이구치 쇼고(井口省吾), 우쓰노미야 다로(宇都宮太郎) 등 조선군 수뇌부들은 영국·프랑스 등 구미 제국의 식민지 군대의 선례를 중시하고 조선인의 ‘동화’와 조선인의 군사적 이용 가능성을 낙관하여, 조선인에게 육군사관학교의 문호를 개방하거나 조선인 지원병 부대를 편성하는 등 조선인을 군사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전제로 조선 주둔 병력을 증강할 것을 주장하였다고 한다. 조선군의 주장은 3.1운동의 충격 속에서 더욱 절실했지만 육군 수뇌부는 조선인 장교의 재생산, 조선인 부대 편성 및 이를 전제로 한 조선군 증강에는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특히 조슈과의 적자(嫡子)인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는 러일전쟁 이후 대러시아 작전·군비라는 당면의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예산 및 국내 정치적 환경이라는 정치·경제·군사적 합리성을 중시하여, 조선인을 일본 군대에 받아들이기 위해 조선군을 증강한다는 발상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3.1운동의 발발로 인해 조선인의 ‘동화’ 가능성에 대한 기존의 낙관적 인식을 약화시켜 조선군 증강에는 소극적이 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조선인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조선군과 육군 중앙의 대립이 193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다고 결론지었다. 식민지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 육군이 3.1운동 이후 식민지(조선)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정책을 펼쳤는지 앞으로의 연구가 기대된다.

박양신의 「1920년대 일본 식민정책학의 식민정책론: 식민지 본위주의와 자치주의」는 식민정책학으로 대표되는 제국개조의 사상을 다루고 있다. 박양신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사조의 변화와, 민족자결주의에 자극받아 발생한 식민지 조선에서의 3.1운동이 일본의 식민정책학에 미친 영향을, 당시의 대표적인 식민정책학자인 아마모토 미오노(山本美越乃), 이즈미 아키라(泉哲), 야나이하라 다다오(矢内原忠雄)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일본의 식민정책학은 3.1운동 이후 식민국 측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던 것이 식민지 측의 이익을 고려한 ‘식민지 본위’ 통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식민지 통치방식을 둘러싼 논의도 동화주의를 비

관하고 자치주의를 주장하는 데에서 일치된 견해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식민정책학자들은 조선과 타이완에 대해 ‘조선 본위’, ‘타이완 본위’의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동화주의를 비판하고 자치주의를 통치 방침으로 채용할 것을 주장했으나 조선의회, 타이완의회의 설립을 둘러싸고는 그 시기와 지역 타당성에서 의견의 차이를 보였다고 결론짓고 있다. 식민정책학과 실제 식민지 정책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겠다.

이동훈의 「일본인 식민자 사회가 바라본 3.1운동: ‘재조일본인’의 ‘조선 소요’(朝鮮騷擾) 인식」은 ‘재조일본인’ 사회가 3.1운동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재조일본인 언론계의 동향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3.1운동 발생 초기 재조일본인 사회는 3.1운동을 국제 정세에 무지한 일부의 ‘폭도’가 일으킨 ‘만세소동’으로 폄하하면서 외부 배후설을 제기했다고 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문화정치’로의 전환이라는 뜻밖의 정치적 전환을 경험하면서, ‘무단정치’ 시기에 행해진 억압적인 통치와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횡포를 일부 분 인정하면서 자성을 촉구하는 의견이 등장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동훈은 3.1운동에 대한 ‘내지’의 일본인과 재조일본인 사이의 차이를 지적했다. 유희책을 주장한 ‘내지’의 일본인들과 달리 재조일본인들은 3.1운동 이후 강경한 식민지 통치정책을 주장했는데, 이는 태생부터 조선인 사회에 대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지닌 재조일본인들의 ‘식민자의식’에 기인한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재조일본인들의 식민지인식이 전후 일본의 한국 인식의 근저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식민자의식’ 연구의 심화를 기대해 본다.

박은영의 논문 「고쿠민신문(國民新聞)에 나타난 3.1운동」에서는 고쿠민신문에 나타난 3.1운동 보도의 특징, 논조의 변화, ‘제국의 위기’를 검토했다. 고쿠민신문은 경성일보, 매일신보 경영을 통해 축적된 네트워크와 정보력을 바탕으로 조선인의 ‘독립’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시각적 이미지의 사용을 통해 동화주의적 지배의 채용을 주장하면서도 식민지 조선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3.1운동이 격화되자 정부의 식

민통치 방침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한 다른 신문들과 달리, 고쿠민신문은 3.1운동을 제국일본의 위기로 파악하여 직접적인 정부 비판을 피하고 정부를 옹호하는 논조를 전개했다고 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창된 윌슨의 신질서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 사장은 식민지 조선의 3.1운동을 통해 제국의 위기를 환기하는 한편, 안정적인 제국 존립을 위한 식민 정책으로서 강력한 동화와 일체화를 주장했다고 결론짓고 있다. 박은영의 논문은 정부와 밀착했고 조선과도 관련이 깊었던 고쿠민신문에 주목하여 타 신문과 구별되는 3.1운동 보도의 특징과 고쿠민 신문계열 지식인이 가지고 있던 제국의 위기감을 적확하게 포착해냈다.

곽형덕의 「피포위 공포와 살육의 기억: 일본문학이 기록한 3.1운동과 조선인」은 일본문학이 3.1운동을 어떻게 기록/기억했는지를 ‘피포위 공포’와 ‘살육의 기억’에 초점을 맞춰서 재조명했다. 곽형덕은 나카니시 이노스케(中西伊之助)의 「불령선인」과 나카지마 아쓰시(中島敦)의 「순사가 있는 풍경: 1923년의 스케치 하나」, 그리고 히라바야시 다이코(平林たい子)의 「숲속」이 3.1운동에서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까지 일본인의 ‘피포위 공포’와 ‘살육의 기억’을 담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불령선인」과 「순사가 있는 풍경」은 일본 제국주의 정책과 식민 정책이 야기한 ‘민족의 죄’를 성찰했고, 「숲속」은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과 사회주의자를 연결시켜 살육의 기억과 민족의 죄를 응시했다는 것이다. 3.1운동을 다룬 일본문학 작품이 매우 적은 상황에서 일본문학이 그린 3.1운동을 재조명한 귀중한 연구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의 5편의 논문으로는 이번 특집의 주제(일본·일본인과 3.1운동)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집의 내용을 좀 더 풍성하고 균형 있게 구성하기 위해 원로 연구자와 중진 연구자 두 분께 특별기고를 의뢰했다.

한상일의 「요시노 사쿠조와 3.1운동」은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이론가이자 ‘자유주의적 제국주의자’(liberal imperialist)였던 도쿄제국대학 교수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의 3.1운동 이후의 조선관과 조선독립 문제를 고찰했다.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요시노가 국제적 제국주의를 반대하면서도 ‘식민지’ 조선

의 보존을 주장했고, 동화정책으로 대표되는 총독부의 식민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조선지배를 찬동하는 등, 요시노의 모순된 논리와 조선관의 한계를 지적했다.

전상숙의 「파리강화회의의 현실과 ‘식민지 조선’의 3.1운동」은 민족지도자들의 파리강화회의에서의 외교활동과 국제인식을 고찰했다. 필자는 민족지도자들이 파리강화회의를 경험하며 국제정치의 현실을 절감하고 일선 미국 대통령의 이상주의의 허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일본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었기에, 열강을 향해 지속적으로 독립을 호소하며 한편으로는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현실적인 선택을 했던 것으로 파악한다. 이것이 바로 식민지·약소민족의 현실주의 정치운동이었다는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에 대한 책임과 영토 조정, 민족자결원칙과 국제연맹규약 등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했던 파리강화회의는 제국주의 국가 간의, 그리고 제국주의 국가들과 식민지들 간의 연대, 공존, 대립, 갈등이 교차하는 논의의 장이었다. 파리강화회의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논의뿐 아니라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파리강화회의가 갖는 역사적 의의를 재exam할 필요를 절감했다.

이번 호에는 특집 논문 외에도 투고된 세 편의 논문을 연구논단으로 실었다.

임지현의 「이상한 병치(併置): 막시밀리안 콜베와 나가사키 피폭자의 신성화」는 전후 일본의 기억 문화에서 발견되는 아우슈비츠에서 순교한 폴란드 가톨릭 콜베 신부 숭배 현상을 분석했다. 임지현의 논문은 나가사키의 콜베 신부 숭배 현상을 일본의 가톨릭 원폭 희생자들을 순교자로 만드는 기억의 신성화 과정이라는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재구성했다. 폴란드와 일본을 잇는 트랜스내셔널한 기억 공간에서 전후 일본의 희생자의식 민족주의에 종교적 아우라가 더해지고 신성화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정호석의 「전후(戰後)를 사는 ‘오모니’: 재일한인 모성 표상의 계보학」은 전후 일본 사회에서 ‘오모니’(オモニ)라는 표현이 전유되어온 양상을 밝힘으로써 재일한인 여성상이 갖는 역사성을 탐구했다. ‘오모니’는 식민지기 재

조일본인의 가정에 고용된 조선인 여성 —가사사용인—에 대한 호칭이었으나 전후, 한인 2세대 및 일본인들에 의해 다양한 맥락에서 언급, 재해석되는 가운데 제일 한인 여성에 대한 지배적인 표상으로 자리잡았다고 한다. 김희로 사건을 계기로 대중적인 주목을 받으며 주류 미디어 담론에 편입된 어온 ‘오모니’상은 ‘인고의 어머니’로 협애화될 수 없는 복수의 층위를 가지며, 그 기표가 일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향한 다양한 실천과 복합적인 관계를 맺는 가운데 그 의미를 수정, 확장해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효진의 「뮤지엄 이후의 뮤지엄: 일본 만화뮤지엄의 사례와 전망」은 일본의 만화뮤지엄이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배경, 그리고 그를 둘러싼 뮤지엄과 대중문화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일본의 만화뮤지엄이 안고 있는 과제와 실제 만화뮤지엄의 현황에 대해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그리고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살폈다. 기존의 수목형 뮤지엄에서는 불가능했던 다원화된 지식과 문화의 공유, 즉 리즘형 뮤지엄의 가능성이 탐색되는 공간으로서 일본의 만화뮤지엄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